

# 광주 쓰레기소각장 설명회...주민 반응은 '싸늘'

### 시, 서구 2곳서 "악취·온실가스 감축에 주민 기금 지원" 당위성 설명 주민들 "악취 되풀이·절차 투명성 의심에 지역 이미지 실추" 반발 지난달 열린 광산구 설명회서도 비슷한 지적...사업 추진 차질 우려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 입지 공모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으나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 서구는 19일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농성동 서구청에서 각각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 관계자는 소각장 설치 시 쓰레기 매립 양과 집중수 농도가 줄어들며 악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이후 이대르라면 2030년 이후에는 연간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외로 쓰레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소각장이 들어설 자치구에 580억원 수준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비롯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각장에는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해 초과배출을 방지할 계획이며,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은 연간 1회 이상 측정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각장 설치 전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갖출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광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후보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후보지와 자적 요건 통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별다른 소통도 하지 않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후보지로 꼽히는 서창동, 매월동 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도 매월동의 경우 인근 군공항으로 인해 시설물 높이 제한이 있어 굴뚝을 45m 이상 높이지 못하는 등 제약 사항이 많다고 주민들은 반박했다.

서창동의 한 주민은 "당초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자치구별로 주민 공청회와 견학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업 종료 기간이 6년 남았으며 급하게 주민 설명회를 열다니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세하동 주민은 "과거 상무소각장 인근 주민들도 날씨가 흐릴 때마다 악취가 풍겨온다는 불만을 쏟아냈는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한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소각시설이 들어올 경우 그 존재만으로 불쾌한 이미지를 줄 텐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설명회 도중 "서구는 이미 상무소각장을 통해 악취 등 피해를 입었다. 다시는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안된다"며 설명회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상무소각장의 경우 음식물·하수 처리 등 시설이 밀집돼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는데다가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 악취 등 피해가 적다. 타 지역 소각 시설을 견학할 계획도 있으니 직접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며 "과거 진행 과정의 아쉬움은 있었으나,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산구에서 치러진 주민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 삼도동의 한 주민은 "광주시가 소각장 설치 시의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무시하고 지원과 혜택만 강조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도못해 쓰레기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악취 피해는 없을 수가 없지 않느냐"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당연히 설치해줘야 할 주민 편의 시설을 선심스듯 보상안으로 내놓고, 주민들과 소통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5개 자치구에

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합해서 처리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있다.

2030년까지 3237억원(지하 설치시 4000억원)을 투입해 6만 6000여㎡ 공간에 하루 65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소각장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하고 후보지를 모색해 왔으나 이번이 하향할 됐다.

광주시는 이날 중 제3차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다시 모을 계획이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먼저 후보지를 공모해 입지 요건을 평가한 뒤, 광주시로 넘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동구, 22일 북구, 28일 남구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광산구는 26일부터 21개 동을 돌며 동별 설명회도 연다.

입지 공모는 이날 중으로 각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개인, 법인 등이 응모 대상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광주시에 질문을 하고 있다.

## 교각공사 구조물과 "황" 목포서 어선 선장 사망

어선이 목포 해상 교각 공사 구조물과 충돌해 선장이 숨졌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남 새벽 2시 10분께 목포 달리도와 외달리도를 잇는 보행 연도교 개설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과 연안복합 어선 A(1.64t·목포선적)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배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선장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B씨는 혼자 낚시잡이 중이었으며 조업을 마치고 북항으로 복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장소에서는 목포시가 발주한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교각 구조물에는 4개의 등부표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앞부분이 구조물 위에 올라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경은 B씨가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등부표 사이로 들어가면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

## 자전거 몰다 트럭과 "황" 광주서 70대 숨져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면서 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용전동의 한 도로에서 A(79)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B(26)씨가 몰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갓길을 달리던 A씨의 자전거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달리던 B씨 차량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또 사망사고...외주업체 직원 감전사

### 발전기 수리하던 60대 숨져

### 올해만 4명 사망...안전의식 실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를 수리하던 60대 외주업체 직원이 감전돼 숨졌다.

올해에만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8월 12자 광주일보 1면)하는 등 산재가 잇따르자 사측의 안전의식 실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실에서 외주업체 직원 60대 A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차단기가 울려진(3만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스터빈 발전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호타이어 전기시설 관리를 맡은 하청업체가 위탁한 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정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차단기가 울려져 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올해 5개월 만에 A씨를 포함해 4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졌다는 점에서 '노동자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앞서 지난달 2일 광주공장에서 지게차가 급정차해 지게차에 실린 원자재가 40대 노동자에게 쏟아져 사망 사고가 났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조지아공장(10일)과 곡성공장(29일)에서 끼임 사고로 2명이 숨졌다.

금호타이어 측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과속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건에 대해 금호타이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출동 경찰 4명에 흥기 휘둘러 부상 입힌 50대 징역 7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9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께 길가던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도주한 뒤, 신고받고 A씨 자택을 찾아온 경찰관 4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일 상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자택

대문을 두드리자 A씨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며 문을 열고 나와 흥기를 휘둘러 경찰과 4명에게 전치 2~4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흥기와 테이저 건을 사용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행인은 몇년 전부터 쫓아다니던 간첩단 관련자로 알고 밀렸을 뿐이고, 경찰관도 무장한 간첩단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행위로 흥기를 휘둘른 것"이라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와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인용했고 징역 7년(1명)과 징역 5년(6명)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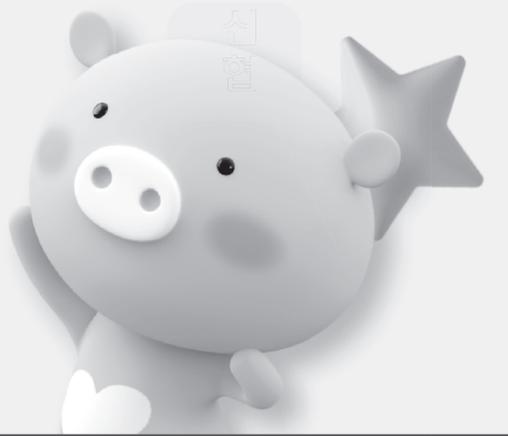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